

이름뿐인 우체국 서적우편물 할인제도

제도 모르는 출판사들 많아 할인 못받아



서적 우편물 발송료 할인제도는 이용자들의 정보 부족과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우체국의 내부 전경.

“발송료를 할인해준다고요? 아니 그런 게 언제 생겼죠? 오래됐습니까? 몰랐네요. 아, 같은 책을 10통 이상 부칠 때만 해당되는 모양이군요. 그것도 큰 우체국에서만 가능하고요. 우편번호 앞의 세자리도 분류해야 한다면 꽤 귀찮은 일이네요. 복잡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종종 이용해야겠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해

출판사들마다 전화를 걸어 서적우편물 할인 제도를 아느냐고 물어봤으나,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우체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책에 한해서 똑같은 중량의 우편물을 10통 이상 부칠 때 발송료를 50% 감액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출판사 실무담당자에게는 이런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 정기간행물만 할인되고 일반 서적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보 부족으로 발송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우체국의 발송료 할인제도가 널리 알

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할인 서비스가 있다고 적극 홍보하지 않으니, 직접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한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실제 우체국에 가보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팻말도 없을 뿐더러, 담당직원이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는 출판사들은 대부분 배본대행소나 택배서비스를 통해 책을 발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체국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우체국을 이용해 책을 부칠 때는 저자에게 보내거나 기타 단발성 홍보물일 경우가 많아 ‘10통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뿐더러, 더구나 책마다 ‘중량차이’가 나면 ‘요금별납우편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이 할인제도의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시행자 편의주의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감액요건을 살펴보자. 현재 발행 빈도에 따라 일간(주3회 이상)의 경우 일반우편요금의 75%, 주간(월4회 이상) 70%, 월간(월1회 이상) 55%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일반서적은 50%인데 그 중량이 1.2kg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어야 하고, 상품의 선전과 광고가 전 지면의 5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부분에 ‘서적’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1회 1백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은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해 묶음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때 묶음의 두께는 3백mm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보니 웬만한 이용자들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우편제도가 독서문화 향상 이끌어

사실 위에서 거론한 규정들은 이용자에게 불편할지언정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문제는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이 대형우체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정집에는 ‘직접 배달할 우체국’이나 ‘4급이나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개 각 구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로 지역에서는 광화문 우체국에 가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 우체국과 멀리 떨어진 사업장일 경우 할인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동네우체국을 놔두고 멀리 나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르고 추가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현행 서적우편물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은 별납제도(예컨대 10통 이상의 동일중량 우편물)와 제출제도(큰 우체국)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압축된다. 서울체신청 우정사업본부의 제도 담당 신동엽씨는 이런 불만에 대해 “서적우편물 할인제도는 우체국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별납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 제출제도 또한 작은 우체국에서 배달우체국으로 옮겨오는 데 추가비용과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 사실 우체국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서적에 대해서는 더 배려해주고 싶지만, 다른 현안들이 쌓여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신구대 출판정보미디어학과 전영표 교수는 우리나라 우편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구미권을 볼 때 우편제도가 독서문화 진작과 정기간행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우리의 경우는 할인규정이 너무 까다로우실 실질적인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규정을 좀더 완화해 모든 서적출판물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제도로 거듭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강성민 기자